

## 인사말

# 우리나라 방산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백영훈**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방위산업** 이 시작된지 올해로 25  
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날 미국에만 의존했던 방위산업 지원태세를 벗어나 자주국방의 기틀을 우리 힘으로 확고히 갖추기 위해 우리 방위산업이 걸어온 발자취는 실로 눈부신 개척의 역사였고 시련과 도약의 현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국가적 지원체제가 있었고 온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크게 각광을 받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위산업은 현재 날로 어려워지는 경영여건에 부딪쳐서 그 어느때보다도 침체 일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별기업 혼자서 이런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는 매우 어렵고 국방부도 혼자의 힘으로 밀려오는 난국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의 육성이라는 국민전체의 의식과 열기가 크게 식어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방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 기술자, 종업원 전체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실의에 가득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말하듯이 방위산업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국가적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도 불확실한 여건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과거보다도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는 형세입니다.

지난 4월 15일 롯데 호텔에서 방위산업학회와 진흥회가 공동 주관하여 방산육성을 위한 고위정책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방산학회 임원들과 정부 측의 경제기획원, 국방부, 상공부, 과기처 등에서 실질적 정책담당자인 차관보 급이 참석하고, 현 방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를 통해 황동준 박사는 당연한 방산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분석, 정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업체 사장들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간담회 진행 순서대로 요약,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 현재 방산업체들은 가동률 저하에 따른 경영난과 유희시설의 유지문제, 향후 국방연구개발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 방산업체 종사자들의 의욕 부진 그리고 국방예산 감소추세의 직접적인 영향 등으로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불안요소로 주목 받고 있어 한반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방산업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자리는 업계대표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방산의 문제가 무엇이고 현안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재점검하고 2000년대 방산 육성을 재가늠해 보고자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임을 통해 방위산업의 새로운 위상이 정립되기를 희망합니다.

## 주제 발표

**황 동 준**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올해**는 우리나라가 방위산업을 착수한 지 25년째가 되는 해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건설의 중추와 국가산업발전의 개척자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탈냉전이후 몰아닥친 평화무드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국방예산의 감소추세,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 소요의 격감, 국방 연구개발 능력의 미흡 및 해외 기술의존의 심화 등으로 지금까지 구축한 방위산업기술기반의 유지마저 곤란한 실정에 당면하고 있으며, 향후 고도정밀무기 개발 생산능력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실로 나타난 북한의 핵 개발 의혹에 직면하여 북한 당국자들의 「한반도 불바다」 전쟁위협 발언을 상기할 때, 자주국방을 위한 자체 무기생산능력 확보의 절실함을 느낀다.

이번 「한반도 불바다」 발언과 미국방장관의 전쟁 불사론, 북한 핵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해외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의 상황은 너무나 평온하고 안정적인 현상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물론 한반도 안보 불안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요란스럽게 떠들어 국민을 동요시킬 필요도 없다. 그러나 무엇인가 허전하고 『이래서는 안되는데……, 정신차리고 잘 해야 되는데…』하는 자책감에 빠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무기개발 및 방위산업 기반강화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정치 여건변화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와 연구기관, 업체의 통합된 노력결집이 가장 시급하다

얼마남지 않은 21세기에 우리가 현재 당면한 것과 같은 안보현실이 주변국으로부터 올 가능성을 상상해 볼때, 우리는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체제를 재정비(Restructuring)해야 한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비전은 있는가? 현재 우리의 방위산업은 발전이나? 퇴보나? 의 갈림길에 있다.

현재 방산업체들은 가동률 저하에 따른 경영난과 유희시설의 유지문제, 해외 기술 의존과 국산화율 미흡에 따른 내실화 문제, 향후 국방 연구개발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 방산업체 종사자들의 의욕 부진 그리고 국방예산 감소추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 등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지난 수년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방위산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향들을 제시했으나, 정부의 구체적 추진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 이러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단기적 처방으로는 문제해결이 안되며, 21세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방위산업 구조재편과 방향 설정이 시급함을 인식하면서 방위산업의 당면현안과 대처방안을 제안한다.

### 방위 산업 당면 현안

우리의 방위산업이 당면한 현안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대변할 수 있다.

**첫째,** 재래식 기본병기의 국내소요가 거의 충족된 상태로 인한 생산물량 감소로 방산업체 경영이 악화된 상태이다.

기동장비, 화포 및 탄약 등 생산업체는 40% 내외의 가동률로 인하여 적자가 가중되어 방산공장 운영의 한계에 봉착하여 유희 기술인력의 집단 감원사태가 예상된다.

향후 인력과 생산설비를 임의 폐기시 기본병기 조달원이 상실되어 장비의 가동률저하는 물론 전시대비의 곤란이 예상되나 정부에서 임의폐기를 제재할 방안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렇다고 업체로 하여금 유희설비 및 인력유지비를 계속부담시킬수도 없는 형편이다.

**둘째,** 경직된 국방연구개발체제와 업체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참여제도 부재로 연구개발 성과 부진 및 고도정밀 무기체계 개발여건 조성의 미흡이다.

체계 조립 및 단순개발 위주의 연구개발과 소요시기 충족 및 경제성 위주 획득으로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지향성이 부족하고 모든

연구개발사업(정부주도, 업체주도)에 대한 國科研의 조정·통제, 개발기간 장기화, 연구개발비 보상 미흡 등으로 업체가 연구개발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는데 업체의 능력을 고려한 연구개발 활성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해외구매 및 기술도입생산을 통한 무기획득시 종합적 획득전략 부재로, 무기 구매력을 활용한 첨단기술 확보 및 국내생산 기반 강화가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예를들면 기술도입생산, 해외구매와 함께 연구개발, 성능개량, 부품국산화 등 후속 프로그램들이 종합검토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단일사업 검토위주로 경제성 제고 및 방산 기반 구축이 곤란했다.

넷째, 최초 무기체계 소요제기시에 작성된 무기요구성능(ROC)의 부정확으로 사업추진 지연 및 융통성에 제한이 있었다.

즉, 과도하고 달성 불가능한 ROC 설정으로 예산 낭비 및 사업추진의 경직성을 초래하였으며 민수기술의 첨단화에 따른 상용부품의 활용제도 역시 미흡하다.

다섯째, 방산특조법,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 국산화 추진 방침 및 절차의 개발대상이 상이하고, 연계성이 부족하다.

또한 국산화개발비 비현실화로 인한 부품 국산화 의욕 부족, 기술도입생산 및 절충교역시 국산화 대상품목의 체계적, 전략적 선정과 부품 및 구성품 국산화 개발제도 미정착으로 튼튼하고 내실있는 방산기반 구축이 미흡한 형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의 중장기 방위산업 정책에 대한 확고한 방향제시 및 방산발전을 위한 세부적 정책개발이 미흡하다고 본다.

정부차원의 통합기능 미흡으로 인한 구체

적 목표부재하에서 개념적인 방향제시에 그치고 있다.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의 빈번한 변경 및 중기계획사업의 수시변동으로 신규 고도정밀 무기 개발, 생산, 획득 방향이 불확실하다.

#### \* 당면현안 소결론

지금까지 제시한 당면현안을 종합해볼때

— 향후 군사력 소요를 고려시, 재래식 기본무기에 대한 신규소요는 격감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기본 무기생산시설에 대해 생산시설 및 기술인력을 어느정도 축소하여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폐기할 것인가? 등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1세기 군사기술위협 및 지역안보여건에 대처하고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무기체계 생산능력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연구개발 및 효율적인 생산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군사력 현대화에 소요되는 우리의 무기구매력을 최대한 활용, 고도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 생산능력을 확보하여 방산기반을 내실화할 수 있는 종합전략을 어떻게 수립하여야 하는가?

— 향후의 무기개발 및 방위산업정책은 범정부적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총괄, 군사력 소요 충족은 물론 국가산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데, 그 방향은? 등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방위 산업 기반의 재구축

#### • 세계 방위산업·기술동향 요약

— 이데올로기 중심의 양극체제에서 경제

와 기술중심의 다극체제로 안보환경이 전환됨에 따라 신규장비의 생산은 축소하지만, 신기술 축적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존장비의 성능개량을 적극 추진하면서 첨단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및 이전통제정책의 강화와 함께 선진국의 첨단기술 이전기피로 자체 기술개발없이 자주국방 불가 및 동등한 조건의 국제협력 파트너로서 참여가 곤란하다.

— 세계 방산시장 축소에 적응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간 통합, 축소, 폐업이 진행중이며, 탄약, 화포, 전투차량 등 필수 기본 무기생산은 정부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연구개발·생산·정비의 통합체제를 구축하는 등 방산구조를 재조정하고 있다.

— 방산기술의 과급효과(Spin-off)에서 민수기술의 흡수효과(Spin-on)에 역점을 두어 군사기술의 민수화, 신기술개발시 민수 겸용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상용규격의 대폭 수용과, 획득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개발기간을 단축하여 평시의 낭비적 획득관리체제를 개혁하고 있다.

— 방산협력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방산기술 투자를 H/W 중심에서 S/W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 • 방산 기반 재구축

세계방위산업 및 기술동향을 고려할때 우리의 방산기반 재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방산기반의 역할과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평시 군 소요에 적정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 조달기반 제공.

— 군사기술위협에 대처할 수 있고, 필요시 생산과 즉시 연계될 수 있는 기술경쟁력 유지.

— 생산물량변화에 적응 가능한 융통성있는 생산체계 유지에 두어야 한다.

방산기반 재구축시 정책 선택 문제는 民軍 共用기술과 군 고유기술간의 선택, 방산시설의 민간소유와 정부소유 및 운영방법의 선택, 경쟁적 조달과 독점 공급간의 선택, 주계약업체, 하청업체, 부품 공급업체 등의 방산생산구조 전문화·계열화의 범위와 정부 책임·역할의 문제, 무기체계의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의존간의 선택등 정책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 • 방산기반 재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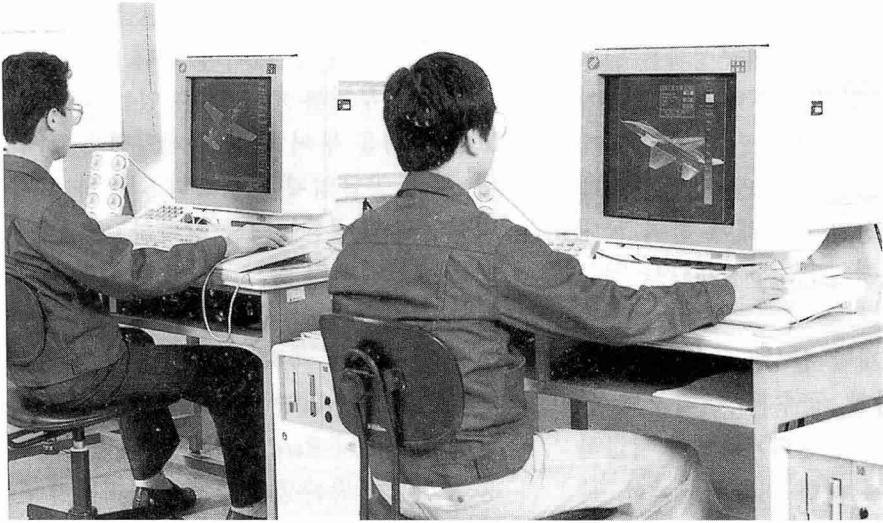
— 방산경영 구조는 현행의 민간소유·민간운영(CO-CO)체제를 유지하되, 필수 기본무기분야(탄약, 총포 등)는 특성에 따라 CO/GO-CO(대부분 민간소유이나 일부 필수 설비 및 기술인력 정부 소유·지원)를 혼용해야 한다.

— 방산생산구조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 경쟁체제로 운영하되, 한정적인 국내수요와 민수기술과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특성별 전문·계열화 체제를 구축해야하며, 전문계열화는 소요 부족시는 독점 원칙을 적용하고, 기술개발 촉진 필요시는 경쟁원칙을 적용하며, 국가산업·기술발전전략과 연계된 체제를 유도하고, 신규분야(S/W, R/D) 전문업체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신규업체가 방위산업에 자유롭게 참여(Entry)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야 한다.

— 향후 수요 부재 및 기술 진부화 분야의 기존 생산시설은 과감히 정리하고, 필수 기본무기생산에 대한 유휴대책은 CO/GO-CO 개념에 의거 정책적 지원(예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대부분의 연구개발사업은 방산업체가



◀연구개발역할 조정은 國科研이 고도정밀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사업만 수행하고, 연구개발의 기타 지원업무는 유관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업체는 민수 우위 기술 및 재래식 무기개발에 역점을 두고, 국방부·업체간 직접계약, 업체의 개발책임성을 부여하고, 무기체계의 업체 자체 연구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주축이 되어 직접 책임지고 수행토록 하고, 國科研은 고도정밀무기 및 업체가 할 수 없거나 비경제적인 핵심기술분야만을 담당토록해야 한다.

— 대형 연구개발사업, 해외구매 및 기술 도입 생산사업 등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검토하여 民軍共用技術(DUT)을 활용하여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 중기계획소요의 변경최소화를 통한 생산물량의 안정성 및 균등 생산추진으로 방산경영여건의 합리화를 모색해야하며, 필요시 Low Production Rate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들면 F-16, UH-60 생산완료후 어떻게 할것인가? 등의 문제 해결이다.

— 연구개발·생산·정비의 통합생산기술 기반 구축으로 성능개량 및 수명 연장, 부품 국산화 제고, 필수 기술인력 유지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 국제 공동연구개발, 생산, 수출 등 적극적인 방산협력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생산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 연구 개발 분야

— 새로운 국방연구개발 여건의 조성 과 생산적인 연구개발체제의 정립은 방산기반구축 및 활성화의 시발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 상당한 수준에 있는 국내산업 및 민간 과학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군공용기술 활용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방산운영체제에서는 방산업체가 연구개발 주도 책임 세력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

— 국방연구개발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예산적 뒷받침이 시급하고, 특수 무기체계 연구개발 집단의 핵심 정예화(국가적 차원)가 필요하다.

— 연구개발 역할 조정은 國科研이 고도정밀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사업만 수행하고, 연구개발의 기타 지원업무는 유관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업체는 민수 우위 기술 및 재래식 무기개발에 역점을 두고, 국방부·업체간 직접계약, 업체의 개발책임성을 부여하고, 무기체계의 업체 자체 연구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 목표지향 중장기 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여 목표기간내에 명확한 연구성과를 달성하도록 현재 수행중인 과제중 비용 대 효과가 미흡하거나 기술수준이 저급인 과제는 단계 전환시 조기 종결하고, 예정중인 사업은 미래 핵심 전력위주로 선별 추진해야 하며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해외수출무기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업체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로 국방부, 합참, 군수본부, 각군의 연구개발 관리능력(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위험판단, 목표원가 추정 및 연구개발계약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ADD 기능 조정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 및 조직 정비가 시급하고, 연구개발소요제기, 연구개발계약, 시험평가 등의 제도를 정비하여, 업체가 소요제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독자개발개념을 탈피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동소요 및 공동수출로 수요변동에 대처하고, 선진국의 핵심기술획득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탁개발과 공동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적극적인 기술전수체계를 확립하고, 미국, 러시아, 유럽국가, 동남아 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협력체제를 정립하여 다원화해야 한다.

— 성능개량, 개조, 수명연장, 부품개발 등 기존 무기체계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 생산분야

방위산업 생산시설의 전·평시 운영개념 정립 및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즉, 전시 방산업체를 동원하여 주요 무기

체계를 생산함으로써 군의 긴급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양질의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핵심 주계약업체, 하청업체, 부품 공급업체를 명확히 식별하여 이들 핵심업체의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부품·구성품 생산업체의 창의적이고 질적인 향상을 위한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

— 정부조달 계획수립시, 군의 전력화에 큰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핵심 무기에 대해서는 Low-Rate 생산 및 다년도계약을 통해 건강한 방산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 「최저 가격」이 아닌 합리적인 「최선 가격(Best Value)」에 의한 조달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현행 개산계약의 운영방침을 개선해야 한다.

— 후속 무기사업의 시제개발생산, 부품·구성품 생산, 성능개량, 정비 등의 물량을 종합 생산 운영할 수 있도록 방산시설을 통합하여 개발·생산·유지의 연계성 강화 및 효율성 추구가 필요하다.

— 국가별, 무기체계 수준별 다양한 국제협력관계를 적극 추진하여 수출과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해야 한다.

— 수직생산협력(Vertical Production) 방안으로 부품, 구성품, 하부조직 생산과 면허·공동생산후 부품·구성품의 지속적 공급체계를 확보하여, 제3국으로의 공동수출을 추진해야 하고, 해외 무기체계 선정시 무기체계의 성능은 물론 수명, 하청업체 등 국제생산구조, 타국과의 절충교역내역, 부품 역수출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

— 개발·생산협력방안으로 선진국에서 개발되었으나 생산으로 채택되지 않은 무기, 또는 개발, 생산되었으나 계약되지 않은 무

기의 국내 생산과 시설·장비의 한국이전 또는 합작을 모색하는 철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 정비분야

— 주요 무기에 대한 창정비 및 분해수리(Overhaul) 능력 강화는 보유무기의 작전 운용수준 향상과 경제적 군 운영과 직결되며, 특히 첨단 무기 증가 추세에 따라 정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시 방산업체의 운영을 생산과 정비의 통합개념으로 한다면, 평시 업체의 창정비 강화 추세는 당연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업체 창정비 확대시 우려사항으로 군의 군수지원 융통성 감소와 정비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 업체 창정비 확대시, 성능개량, 개조, 생산의 통합운영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분산투자 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

• 방위 산업 정책·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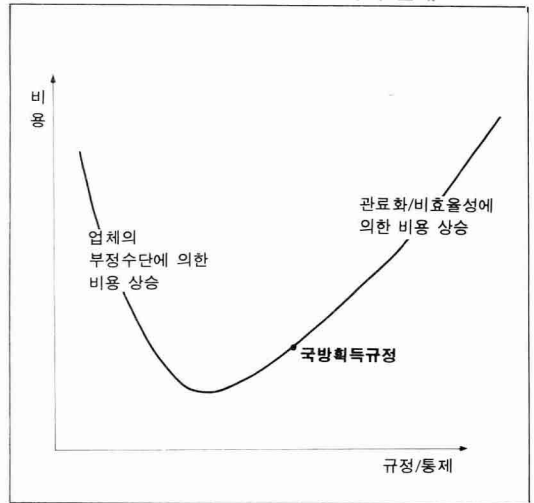
방위산업·군사기술기반을 구축하고 무기체계 획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 안정적인 소요확보
- 종합적인 획득전략/정책정립
- 국방 R & D 정예화 집단
- 국방조달특성에 부합된 개방된 규정/제도

—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정책은 국가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21세기 대비 민족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80년이후 국방부에서 무기개발 및 방산정책을 관장하여 왔으나, 장관 및 고위 정책담당관들의 빈번한 교체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추진이 미흡했고, 국방가용재원, 상용기

비용과 정부규정화 정도와의 관계



술의 군사활용확대, 핵심 고도정밀 무기 확보 등의 미래 획득여건을 고려시, 국방부만으로는 정책수행에서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하에 기존 비서실 기능에 추가 또는 전담비서관을 운용하는 방산기술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경제기획원, 국방부, 상공부, 체신부, 과기처 등 유관부처의 정책협의기능을 강화하며, 현행 방위산업 심의회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

— 국방부, 합참, 각군, 군수본부에 군사기술 및 획득관리 전문인력이 제도적으로 양성·보직될 수 있도록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무기체계 획득의 첨단화, 대형화, 장기화 추세에 따라 전문인력확보가 가장 선결 요건이며, 현역의 경우 위탁교육을 통하여 양성은 되어있으나 보직 및 활용체제가 극히 미흡하며, 민간전문인력 획득·운영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군 군사기술단, 합참무기체계부, 국방부 연구개발 및 획득부서, 군수본부 계약부서 등에 전문인력이 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각종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규정·절차의 전향적 개선으로 계약에 의한 자율과 책임, 동기와 유인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맺는 말

향후 국방예산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클 것이며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안보여건에서 적정수준의 국방비는 유지될 것이다.

국방재원 배분은 현존 전력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되, 미래 잠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방투자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체제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도정밀무기의 개발과 튼튼한 생산기반 유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목표정립하에 강력한 추진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하며, 뚜렷한 개발목표 수립, 우수한 인재 동원, 충분한 지원, 자율과 책임체제하에서 명확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

무기체계 특성과 경제성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재편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정책방향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군 고유기술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상용기술 사용확대와 민·軍共用기술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연구개발, 생산, 정비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주도보다는 업체 책임하에 수행토록 해야 하며 독점 조달 공급보다는 경쟁 원칙에 입각한 획득방법을 채택하고 원칙적으로 핵심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문계열

화 방침을 폐지, 자유화하고, 맹목적으로 국내생산 위주정책은 탈피하고 적극적 국제협력력을 통한 방산기반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무기개발 및 방위산업 기반강화는 국가생존 차원에서 정치여건변화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와 연구기관, 업체의 통합된 노력의 결집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防産技術企劃團(가칭)을 설치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총괄토록 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방위산업·군사기술 종합 발전정책 및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民·官·軍으로 구성된 민간주도 「방위산업 종합발전위원회」를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토록 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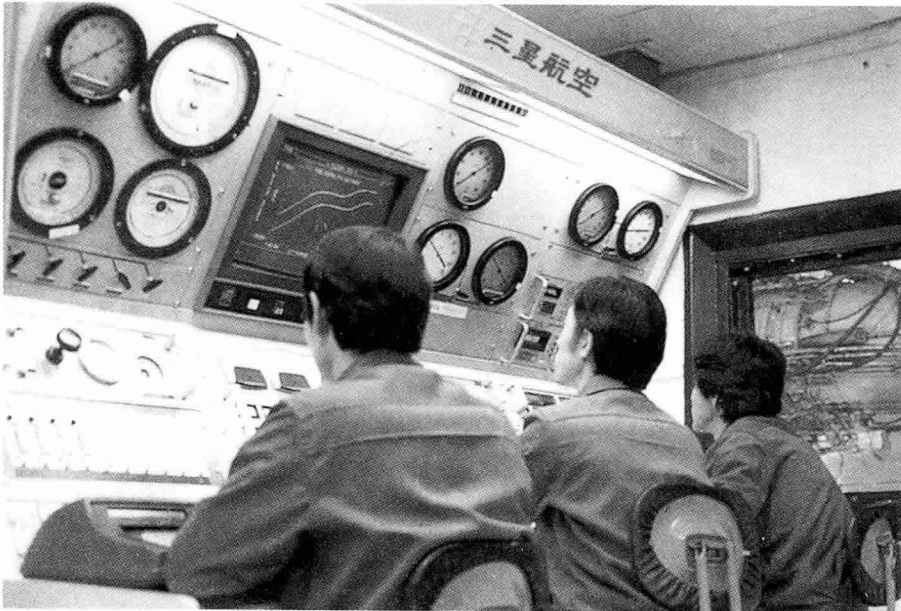
토론

노 석 호 (방산학회 이사 : 삼성항공 부사장)

**지나온** 과정을 말씀드리면 80년대 중반 이후 방산장비를 기술 도입·생산할 때는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재래식 무기설비와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 업체로서는 큰 부담없이 방산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개발된 장비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개량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과거 개발비가 100~200억선이던 것이 1000억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고도정밀 병기의 숫자는 적는데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개발기간도 대략 10년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도정밀병기 부분은 정부 주도가 되면 업



◀ 고도정밀 병기의 숫자는 적는데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개발 기간도 대략 10년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고도정밀병기 부분은 정부 주도가 되면 업체에 개발비가 전액 주어지지 않고 일부만이 지원된다. 따라서 업체가 연구 개발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체에 개발비가 전액 주어지지 않고 일부만이 지원됩니다.

삼성항공의 경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연구개발 인력이 약 600명 필요하며 1년에 300억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여기에 개발비를 더하면 600억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주도가 되었을 때 업체에 연구개발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기간이 10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대통령 재임기간이후에 개발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같이 청와대에 안보기술 협력단을 두어 정권이 교체하더라도 방산정책을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상현** (풍산 사장)

**기본** 병기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본병기의 소요는 없을 것이고 전시에 대비하는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지 폐기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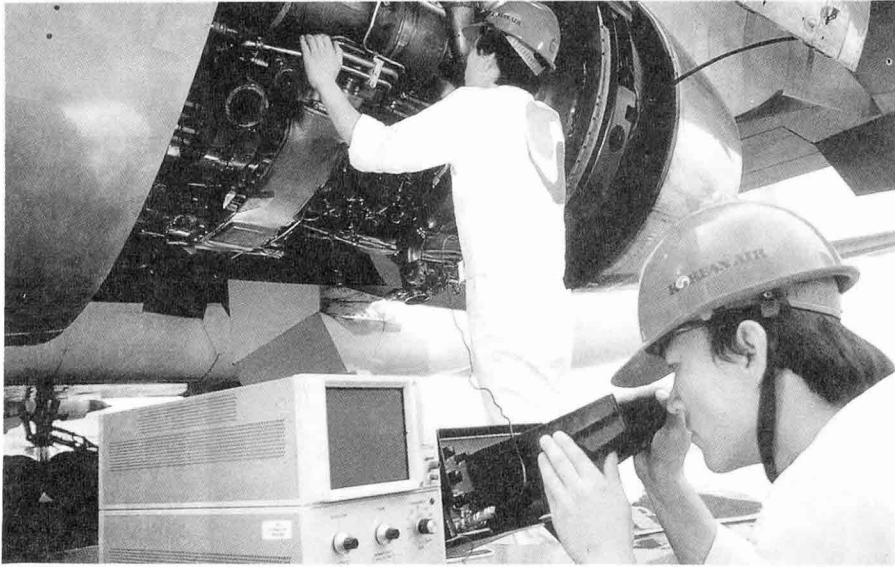
그렇다고, 현재의 여건상 기술인력의 대량 해고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축적해온 기술을 방출하게 되면 다시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방향 제시가 아쉽고 만에 하나 기본병기의 계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면 평시보다 전시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가동률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업종은 아시다시피 민수전환을 할 수 있는 범용장비가 아니고 대부분 전용장비입니다.

이런 전용장비를 미확정 상태에서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인 감소를 해 줌으로써 업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 군에서도 창정비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지만 군의 인력은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업체에 정비를 맡기면 업체가 전문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확실한 정비를 할 수 있다.

**현재** **석진철** (대우중공업 사장)  
 생산하고 있는 방산장비의 전반적인 감소는 아니지만 양자체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방산업체는 필요로 하는 설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인데, 제반분야의 감가상각 비용이 상승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 분야가 앞으로의 가격조절에서 반영되느냐 하는 현실적인 구제방법이 정책에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물건을 만드는 우리 방산업체의 중요한 고객이고, 따라서 방위산업도 팔고 사는 관계의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방진회 내부에 현실을 파악할 수 있고 정리,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산업협력단같은 기구를 구성해서 팔고 사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위** **조양호** (대한항공 사장)  
 산업이 육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전문적인 중소

방위산업체가 많이 도산하였는데, 이는 방위산업 정책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생산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생산 또는 중단이 악순환 되는 것이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코리아타코마도 수년간 고속정에 대한 기술 축적이 되었지만 3년간 유휴기가 생겨 이 업체는 좋은 기술과 인력을 활용 못해 도산하게 되어 우리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 사업유지와 정비를 맡겨 축적된 기술과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정비 기술능력에 대해서도 군에서 창정비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지만 군의 인력은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정비를 맡기면 업체가 전문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확실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화도 비행기를 예로 들면 고정익이다, 회전익이다가 아니라 기술위주의 전문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는 전문화보다 분야별 기술적 전문업체를 키워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효율성과 생산가를 낮추는 것이 전문화의 기본원칙인데 전문화란 명목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를 바꾸면 현재의 기술인력과 투자가 완전 유희화되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또다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면에서 보면 국가적으로도 큰 예산 낭비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계속 추진하고 새로 착수하는 분야에 한해 전문화 계열화로 합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호** (쌍용중공업 사장)

**개발,** 생산, 정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부품 공급과 정비의 기회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대부분 업체가 정비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투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기타 사정등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 업체의 경우 다른 정비업체와 마찬가지로 가동률이 크게 낮은 데 대해서 정비분야의 사업기회가 상실되거나 할 경우 설비라든지 전문인력을 보유하는데 상당한 위험이 따를 뿐더러 우리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1차·2차 하청업체까지 계열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청업체와 협력체제를 유지하는데에도 상당한 애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투자를 방지해 자원의 낭비를 막을 뿐만아니라 업체가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정비를 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고도의 성능이라는 기술적 측면과 함께 방산

업체가 현재 안고있는 고통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라도 직접 창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재검토 해줄 수 있는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병길** (국방부 제2차관보)

**우리** 방산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정리해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국방부에서도 여러번 검토를 해왔던 것이고 수행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은 국방부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업체 모두가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벗어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냉전 종식과 더불어 무기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도 전부 체제를 바꾸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방산업체도 무언가 바꾸지 않으면 이런 시대 상황에서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 업체 대표자들께서 많은 고충을 지적하셨는데 이제 정책입안자들이나 방산을 이끄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를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또 학회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기본병기업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지난해에도 한정된 국방비를 가지고 조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국방예산이나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로 할애하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94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구상되어도 예산과 연결될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갖는 고충을 방산업체를 이끌어가는 사장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옳은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황해웅**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國科**은 70년대 창설된 이후 국방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본산지로서 여러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방연구개발을 國科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투영이 된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장으로서 개괄적으로 돌아보면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 기능을 업체주도로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과연 우리나라 과학인력이 얼마나 되며, 지금 생산업체에 대해서 실비용 발생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차에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증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장차 우리의 연구개발비가 충분할 때는 그와같은 방법도 있겠지만 준비도 없이 앞서가는 논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업체주도 확대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주도라 해서 기업의 역할이 배제되는 경우도 없었고, 업체주도라 해서 정부 역할이 배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역할과 기능분담에 대해서 조금더 깊이 생각해 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업체에서 쓰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이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개발비의 증가분에 대해 별도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집행상 별도의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이라든지 위험을 극복해 가는데 예상치 못했던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정부기관이든 업체든간에 연구개발에 도전하는 여건마련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넓은 이해와 지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방산** 문제도 산업의 문제인데 참고삼아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방산보다는 훨씬 유리한 여건에 있지만 우리나라 업체중 모든 업체가 호황을 누릴때 결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던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농기계 산업입니다.

농기계 산업이 다행히 UR대책에 따르는 여러가지 수요 등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자동차공업이나 모든 기계공업이 활황을 누릴때 농기계 산업은 거의 침몰직전까지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농수산부가 농민과 농기계까지 다루다보니 초기에는 농민, 농수산부, 농기계 업체의 이해가 일치 했습니다. 기계화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업체도 농수산부가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방대한 규모의 지정 금융자금을 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자기 기종이 선택만 되면 상당한 기간동안 수요가 확보되는,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메카니즘과 동떨어지는 행동을 하다보니 수요가 어느정도 포화가 되었을때 이 산업은 새로운 현실에 대해 전혀 적응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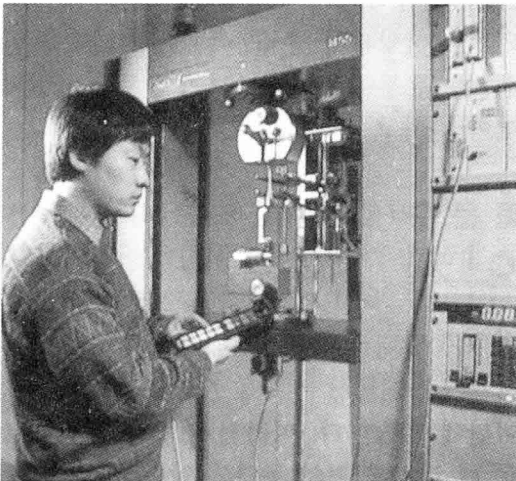
만약에 산업은 상공자원부에서 수요는 수요부처가 관장했던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이 청 남** (청와대 안보비서관)

92, 93년도 국방부에서 평가관이나 사업 조정관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과 방산업체, 경제기획원 등이 갖고 있는 방식에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접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청와대 내의 방산비서관을 두는 문제, 이것도 하나의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이고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원 걸** (상공자원부 항공우주산업과장)

**산업** 차원에서 방위산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우리들과 연결해서 중형 민간항공기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해야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가지 핵심기술이라든지 투자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감안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때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유 현** (과학기술처 연구조정관)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말씀 드리면 첫째 최근에는 국가안보라든가 방위의 개념자체가 단순히 군사력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경제력, 기술개발력 차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결국 방위산업이라든가 방산기술개발에 있어서도 경제력, 기술력 개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안과제로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방산업체가 여러가지 현안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국가라든지 국방부가 육성해야될 방위산업의 개념, 범주 자체도 이제까지의 군수, 방위산업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민수쪽에 포함시켜 함께 포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방부의 기술개발 영역 자체에서도 이제까지 군수 고유의 기술 개발목적에 국한 했었다면 이제는 민수쪽의 기술개발로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가가 지불한 총 R & D 투자중에 현재는 국방쪽이 5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98년도까지는 50% 정도까지 감소시키고 민수쪽의 기술개발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군수·민수 공용 기술개발 쪽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정 린**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업체** 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한 핵심적 요소는 국방비의 적정선 확보입니다.

국방부에서 근자에 취한 여러가지 정책이 어떤면에서는 방산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방이 현재까지 오던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라 생각하시고 국방부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최 대 현** (태산정밀 회장)

**국방**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과거에는 우수인력이 많이 근무했지만 최근에는 우수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공부한 우수 인력이 연구 분야에는 근무하려 하지않고 너나없이 대학 강단에만 서려고 하니 연구분야에 우수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만 해도 대학에서 공부한 우수인력을 연구원으로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한 3년은 훈련을 하고 2년정도 근무할만하면 외국으로 가든지 대학으로 가버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1년동안 일해도 대학에서 6개월 정도 일한만큼의 돈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과 조건에서 누가 일하겠습니까?

연구개발 활성화와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우수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우수한 기술자나 기능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수한 두뇌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수인력이 국방과학 연구분야에 유치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문 수** (방산학회 감사 : 한국화이바 사장)

**업체** 가 겪는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면, 우선 개발만하고 실제 소요 수량이 몇개 안되고 게다가 중단되어 버리곤 하니 정작 전용설비를 해 놓고 가동률이 거의 10% 미만에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측 개념으로 볼 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가능한 부품을 개발소  
요기간 및 비용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도입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게다가 자체 국산화시켰을때 라이선스 비  
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 순수 생산 비용으로  
볼때는 도입가격의 60~70% 가격입니다.

따라서 국내 수요가 다 끝나면 가격 경쟁  
력을 가지고 수출까지 가능하고 민수기술로  
의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점을 살펴보다라도 앞으로 민간에 병  
행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조금 비싸게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복** (기아기공 사장)

**기본** 병기생산업체들은 꼭 병원에 뇌  
사 상태로 입원하고 있는 사람에  
게 죽지 말라고 산소 호흡기를 꽂아 놓은것과  
같습니다. 죽을수 없고 살수도 없는 형편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배치된 화포에 대한  
CSP를 납품을 할때 안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면 전 설비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또 CSP물량이 많으면 괜찮은데 어떤 것은  
5개를 어떤것은 10개로 세상에 5개 각기 위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지도 않는 재료를  
미국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어느 상사가 5개 재료를 저희한테 팝니  
까?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사는 10년 분  
것의 재료를 사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버릴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열처리, 다시  
표면처리하는 설비와 약품도 그대로 타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제발 산소마스크라도 제거해주면 다 정리를  
할텐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지탱만 하  
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산업체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된  
다고 하는 사명감에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업체들도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할 생각  
입니다.

**윤병규** (방산학회 이사 : 협진정밀 사장)  
**아까** 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의 물량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더라도 향후  
인원은 몇명이고 기계시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인력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등 여  
러가지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물량계획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70~80년대에는 개발하느라고 눈코  
뜯새 없이 쫓아 다니며, 일하느라고 정신없  
었는데 지금은 집어치울 수도 없고, 어느 배  
를 타야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  
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든가 수량을 확실히  
결정해 몇개를 향후에는 어떻게 만들라든가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웅** (오리엔탈 사장)

**우리** 나라 방위산업발전이 이대로 가  
면 무너지는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원가계산문제에서 대기업에서 중소  
기업에 하청은 주고 원가계산을 해줄 때 제  
작부품의 사출금형제작비까지 원가에 포함  
시켜 줍니다.

그러나 정부측과 계약시는 금형비 뿐만아  
니라 기술개발비까지도 원가 반영문제로 인  
해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은 문  
제에서부터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